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 안양시 중소기업 성장 잡는 입지규제 해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261건에서 4건으로 통합
- 행안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7개 우수지자체 발표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청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충청에너지서비스)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연장시기가 달라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하여 261건을 4건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7일(금),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기업애로 해소 43, 기업활동 지원 2, 사회적 가치증진 10, 주민생활 불편해결 18, 지역경제 활력 제고 11, 절차 간소화 4

□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 17건의 우수사례 참고1 첨부,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못한 7건은 장려상 별도 전수 예정

-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기영 (044-205-3931)
		담당자	사무관	강말순 (044-205-3933)



참고1

17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 발표사례(10건) >

연번	지자체	사례 분야	사 례 명
1	서울 도봉구	주민생활 불편해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2	대구 본청	기업애로 해소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3	대전 본청	기업애로 해소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4	울산 본청	지역경제 활력제고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5	경기 고양시	기업애로 해소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6	경기 안양시	기업애로 해소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 살리다
7	충북 본청	기업애로 해소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8	충북 청주시	행정절차 간소화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9	경남 본청	기업애로 해소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완화
10	제주 본청	기업애로 해소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 순서는 수상등급과 무관, 직제순임

< 장려상 확정(7건) 사례 >

연번	지자체	사례 분야	사 례 명
1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력제고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2	대구 동구	기업애로 해소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자체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 판매
3	인천 중구	기업애로 해소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4	울산광역시	기업애로 해소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5	충청북도	기업애로 해소	규산염계청관제 사용으로 "블로우다운수 배출 규제" 해결
6	전남 광양시	기업애로 해소	광양 국가산단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7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력제고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현장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2023.11.17.(금) 14:00 - 17:00
KINTEX 제2전시장 7홀

경기도 고양시 고양특례시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특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기존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업 00기업은 2012년부터 제조시설 확장을 희망했으나, '공장의 참고용도'에 한해서만 건축증축 허가 가능하다 인식

개선
00기업의 제조시설 장비 증설에 대한 오래된 기업애로 해결 및 매출액 증대 (2020년 91억 → 2023년 270억 예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기존 특정공원 시설률 20% 초과된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 추가설치 불가로 주민 공원시설 이용 불편

개선 공원 내 일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에 한정하여 특정시설에서 제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충청북도 충청북도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대!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곤충의 가공업 및 유통업은 가능하나 곤충의 생산업 신고는 불가

개선 생산된 곤충이 원자재로 사용 시 곤충생산을 부대시설로 인정, 곤충산업의 고도화기반 마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기존 대구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각각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각 개별법에 따른 입주관리 규정과 양도가격제한 규정을 이중 적용받고 있음

개선 입주신청 간소화(2→1회 신청), 양도가격 제한기간 완화(무기한 → 사용승인 후 10년)

경기안양시 안양시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기업을 살린다



기존 중소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 규제1** 용 복합 기업을 막는 지역산업센터 입지규제 (지역산업센터 제조 기업은 지가 액면가 50만 원만 가능)
 - ⇒ '지' 용 복합 건물 등 생산 판매하는 지역산업센터 입주기업은 타도시 제품이 포함된 용 복합 건물 면적 공시 규제로 인해 되기 위기
- 규제2** 권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 (500㎡ 미만의 소규모 동장은 큰 공장과 달리 '소재지' 변경등록이 없어 지가액 권내 이전 시 '변경등록 불가')
 - ⇒ '기존공장 등록주소 후 신규등록, 처리에 따른 각종 불이익 발생'

개선 4년 만에 중소 제조기업의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

- ① 지역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 ('23.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② 전국 1,400개 지역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용 복합 건물 면적 가능
- ③ 권내 이전 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 ('23.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 전국역 광역 중소규모 제조기업(동량)의 권내이전 시 변경등록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기존 ① 어선 조업 시 기존 스티로폼 부이 사용 방식은 어부가 육안으로 어망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어망 분실이나 조업시간 과다 소모 등 어업활동 애로
② 어업인들은 인증되지 않은 AIS 방식의 전자해양부이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받는 사례 다수

개선 지자체 최초로 저렴하고 편리한 어구 추적용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여 신속한 어구위치 파악으로 연료비 절감, 조업시간 단축 등 어업능률 제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허가
및 추가투자유치



기존

전기차 신공장 건설의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없이 대응할 민간 전문가가 사실상 없어 현대차 측이 울산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

개선

총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3년 하반기 신공장 건축공사 착공 예정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500만㎡ 미만 물류단지개발 시 물류단지 구역지정 관련 위원회 심의, 인허가 절차 (도시교통환경등), 실시계획 승인 등 2~4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발생

개선

민간사업자가 면적 500만㎡ 미만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하여 구역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일괄 '물류단지계획위원회' 심의하도록 개선
-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분야 등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가능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

기존

속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도로안전을 위해 운행을 제한하여 제한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별도의 운행허가를 취득해야 함

→ K-방산사업의 인기로 수출 방산물자 중차량의 운송이 증가하면서 유동적인 선박 일정에 맞춘 도로운행 허가 취득도 증가 추세이나 까다로운 허가기준으로 적기수출에 애로 발생

개선

(국토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창원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내부 기준 변경 및 중차량 낮시간대 시범운영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기존]

도시가스관로 도로점용허가 261건으로 기업의 도로점용 허가 관련 관리 어려움 (점용료 납부 등) 및 매년 허가 기간 만료 건에 대한 연장 대상 파악 및 개별 허가 신청 필요로 과도한 인력, 시간 소요

[개선]

기존 영구 점용허가 261건을 4개 구역 4건으로 통합 변경허가(23.4월)로 행정효율성 제고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생활과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되는 낡은 법적규제!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노력을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보세요!

2023.11.17.(금) 14:00 - 17:00
KINTEX 제2전시장 7홀

참고3

경진대회 발표사례(10건) 요약

* 순위 무관 직제순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서울 도봉구)



서울 근린공원 특정시설 비율 초과 현황



건축물 미수반 실외운동시설 특정시설 제외

- **기존** 특정공원 시설률 20% 초과된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 추가 설치 불가로 주민 공원시설 이용 불편
- **과정** ① 국토교통부와 특정공원시설 법률개정을 위한 2년 이상의 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 추진, ② 특정공원시설률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안건 2회 제출 선정
- **개선** 공원 내 일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에 한정하여 특정시설에서 제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효과** ① 특정공원시설 규제 개혁시 건축물 미수반 운동시설 추가 조성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 ② 건축물 미수반 운동시설이 특정공원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설률 하향 조정으로 향후 공원조성계획의 유연성 확보

②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대구 본청)

혁신도시법	연구개발 특구법	첨단의료 단지법
산·학·연 클러스터	산업 시설 구역	첨단의료 복합단지
부지 취득가격 + 물가상승률 + 매입관련 세금		최초 부지 분양 금액
영구 제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건물사용 승인 전 또는 후 10년간 *첨단의료단지 관리계획 명시

↓
영구제한 → 10년

용도지구별 양도가격 산정기준 및 제한기간

- **기존** 대구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 첨복단지가 각각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혁신도시법 개정예 따라 각 개별법에 따른 입주관리 규정과 양도가격제한 규정을 이중 적용받고 있음
- **과정** ① 19년 이후 혁신도시법 개정 지속 건의(7회) ② ('22.8.20.) VIP 참석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건의 이후 ('23.1.20.) 혁신도시법 개정 발의(강대식 의원 등 10인) ③ ('23.4.7.) 행정안전부 2분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 일부수용 ④ 국토위 법안소위원회 회부, '23년말까지 개정 예정
- **개선** 입주신청 간소화(2→1회 신청), 양도가격 제한기간 완화(무기한 → 사용승인 후 10년)
- **효과** 입주 기업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력 낭비 해소, 이중규제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혁신도시 조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23.3월말) : 대구 157개, 전국 3,135개

③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대전 본청)

<p>「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15명 - 센터장: 교통건설국장 - 구성원: 물류단지개발 업무 관련 공무원 ○ 기능: 자연재난, 에너지, 농업 문화재 공익 하수,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500만㎡ 미만 물류단지개발 시 물류단지 구역지정 관련 위원회 심의, 인허가 절차(도시.교통.환경 등), 실시계획 승인 등 2~4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발생 • 과정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23.8.11.) • 개선 민간사업자가 면적 500만㎡ 미만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하여 구역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일괄 '물류단지계획위원회' 심의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 가능 • 효과 인허가 기간 감소(6개월~1년)로 물류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p>「물류단지계획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27명 - 위원장: 시장 - 구성원: 당연직(2), 전문가(7), 관련 위원회(18) ○ 기능: 물류단지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울산 본청)

 <p>현대차 전기차공장이 들어설 신공기 부지. 이는 34년 만에 조성된 신공기 부지가 10개월 만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10개월 만에 준공을 위해 10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p> <p>현대차 전기차공장 건축허가 마무리 최장 34년 소요 → 10개월만에 완료 - 도시청 "신공기부지 빠른 행정지원 성공세"</p> <p>공장인허가 '3년→10개월' 울산 '공무원 파견' 효과 톡톡</p> <p>현대차 미래모빌리티 복합공간 울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기차 신공장 건설의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대응할 민간 전문가가 사실상 없어 현대차 측이 울산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 • 과정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무원 파견근거 마련,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허가기관-현대차-설계사-시공사 통합 컨설팅” 실시, 개별 허가 및 분리(동시)추진, 협의 업무를 파견공무원이 직접 수행 • 개선 총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3년 하반기 신공장 건축공사 착공 예정 • 효과 허가 기간 2년 단축에 따른 약 30조원의 경제효과 발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수도권 외 지역 최초 자동차 관련 문화·체험·서비스 복합시설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기간 2년 단축에 따른 약 30조원의 경제효과 발생
---	---

⑤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경기 고양시)



- **기존**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업 OO기업은 2012년부터 제조시설 확장을 희망했으나, '공장의 참고용도'에 한해서만 건축증축 허가 가능하다 인식
- **과정** 건축증축허가(공장참고 용도) 신청 협의(2020. 6.), 제조시설 증설 관련 문제 파악 및 기업애로 상담(2020. 11.)
※공장증설 검토 중 틈새 규정(산업집적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제조시설 증설 가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적용
경기도 공장물량 담당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공장증설승인 처리(2021. 2.),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증축 사용승인 처리(2022. 5.), 공장 증설승인 완료신고 처리(2022. 12.)
- **개선** OO기업의 제조시설 장비 증설에 대한 오래된 기업애로 해결 및 매출액 증대(2020년 91억 → 2023년 270억 예상)
- **효과** 산업집적법상 공장증설승인 과정 중에 제조시설 면적 산출을 제조장비 외곽으로 적용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 사례

⑥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경기 안양시)



- **기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규제1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지식산업센터 제조기업은 자사 생산제품만 판매 가능)
↳ 「IoT 융·복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타회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 제품 판매 금지' 규제로 인해 퇴거 위기
규제2 관내 이전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큰 공장과 달리 '소재지 변경항목'이 없어 지자체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 「기존공장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처리에 따른 각종 불편 발생
- **과정** 칠전팔기 규제개선
① 현장의 목소리로 끊임없는 건의 업그레이드('18.1.~'22.5.) (중앙 건의 16회 소통 62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② 규제개선의 결정적 계기,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22.3.)
- **개선** 4년만에 중소 제조기업의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
①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23.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전국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복합 기술제품 판매 가능
②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23.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 전국 약 8만 개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의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가능
- **효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복합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성장 지원, 중소 제조기업의 행정부담 감소(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등), 국가경제의 주역인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⑦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충북 본청)



〈ICT 곤충 생산시설〉



〈ICT 곤충 통합시스템〉

-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곤충의 가공업 및 유통업은 가능하나 곤충의 생산업 신고는 불가
- **과정** 기업애로와 맞닿는 필요성 검토 및 논리 개발·보완 → 관계부처 방문^{3회} → 행안부 간담회 → 법령 개정 다각화 시도^{국토부 → 산자부} → 관계기관 회의^{7전8기} → **수용**
- **개선** 생산된 곤충이 원자재로 사용 시 곤충생산을 부대시설로 인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개정
- **효과** 곤충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신소재 개발로 대체시장 진출기반 마련

⑧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충북 청주시)

구분	허가건수
계	181
'18년	27
'19년	32
'20년	38
'21년	29
'22년	55

※ 2018년~2022년
충청에너지서비스 영구도로
점용 허가현황



〈4개구역 도로점용허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위치도〉

- **기존** 도시가스관로 도로점용허가 261건으로 기업의 도로점용 허가 관련 관리 어려움(점용료 납부 등) 및 매년 허가 기간 만료 건에 대한 연장 대상 파악 및 개별 허가 신청 필요로 과도한 인력, 시간 소요
- **과정** 구역별 도로점용허가 통합 제안, 2022.10.~2023.3.까지 약 6개월 간 매달 도로점용 변경허가 구역별 통합 방안 협의 및 도시가스관로 관망도 작성(5개월 소요)
- **개선** 기존 영구 점용허가 261건을 4개 구역 4건으로 통합 변경허가 ('23.4월)
- **효과** 기업(충청에너지)의 정기분 고지서 분류 업무량 감소 및 허가사항 파악 용이, 매년 개별 허가건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허가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관리 효율성 증가

9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경남 본청)

<p>▶(허가시간) 교통정체 및 교통안전 고려 심야시간(밤12시~5시)에만 운행</p> <p>▶(허가서류) 구조물(교량) 통과하중 계산서 산출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p> <p>▶(허가기간) 최대 3개월로 동일노선에 반복적 허가신청</p> <p>* 방산업체 애로사항</p> <p>▶(허가시간)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허가</p> <p>▶(지침개선) 축중량 12톤도 허가 가능 등 허가지침 개선</p> <p>▶(허가기간) 최대 6개월로 연장</p> <p>*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축하중 10톤~중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도로안전을 위해 운행 제한하여 제한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별도의 운행 허가를 취득해야 함 → K-방산사업의 인기로 수출 방산물자 중 차량의 운송이 증가하면서 유동적인 선박 일정에 맞춘 도로 운행 허가 취득도 증가 추세이나 까다로운 허가기준으로 적기수출에 애로 발생 • 과정 제4차 지방규제혁신 TF회의 안건 상정, 제2차, 제3차,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국토부경찰청·창원시 등 관계 기관 수차례 협의 • 개선 (국토부)제한차량 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창원시)제한차량 운행허가 내부 기준 변경 및 중차량 낮시간대 시범운영 등 • 효과 방산물자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적기 수출 납품 지원
---	--

10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제주 본청)

   <p>* AIS 전자해양부이 시연</p>  <p>* AIS 전자해양부이 특허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①어선 조업 시 기존 스티로폼 부이 사용 방식은 어부가 육안으로 어망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어망 분실이나 조업시간 과다 소요 등 어업활동 애로, ②어업인들은 인증되지 않은 AIS 방식의 전자 해양부이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받는 사례 다수 • 과정 (사)도어선주협의회 현장 애로사항 의견청취 및 수렴('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관 협업체 구성 및 전자해양부이 개발('19.8.~'20.2.), - 세계전파통신회의 AMRD(자율해상무선기기) 규정 대응('19.10.~11.), - 한국측 의제담당, 전파관리소 및 제주해경 업무협의('20.4.~6.), - 국립전파연구원 AIS 기술이용 전파법 개정 협의('20.5.14.), - 블럭형 자가발전 어구 표시 부이 특허 등록('20.11.11.), - 출력기준별 육상 실험국 송수신 성능시험('20.12.~'21.1.), - 통신 출력기준 등 향상을 위한 도어선주협의회장 전문가 간담회('21.6.18), - 어구부이 출력 조정, 안테나 매칭 및 송수신 성능시험('21.10~11월),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AMRD 제26조 기술기준 등록('21.11.17.), - AMRD 어구부이 전자파 적합성 해상 실증시험('22.2.22.), - AIS 기술이용 실증 및 해상 시연회 개최('23.1.17.) • 개선 지자체 최초로 저렴하고 편리한 어구 추적용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여 신속한 어구위치 파악으로 연료비 절감, 조업시간 등 단축 등 어업능률 제고 • 효과 조류 등으로 인한 어망 분실 예방으로 어업경비 절감 및 스마트 어업 확산
--	--